

아침세상



이 경 수

본사 대표이사·관광학 박사

광주·전남 관광산업과 관련해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바로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3회 축제·관광대상’ 시상식이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각 분야별 수상자와 축하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상을 받고 격려하는 자리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수상기관·기업은 대상을 비롯해 콘텐츠, MICE, 여행업, 숙박업, 운수업 등 관광과 관련된 각 부문별로 세분화해 선정됐다.

올해로 세번째 치러진 이번 ‘관광대상’ 시상식에서는 광주 동구와 장흥군이 각각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광주시장상과 전남지사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남관광재단(콘텐츠), 라마다프라자&씨엘리조트 자은도(MICE), ㈜광주휴익여행사·㈜다음투어(여행업), (유)휴름광주두바이호텔(숙박업),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운송업)이 각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수상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이들 수상기관·기업의 수상사례에서 광주·전남 관광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19가 3

년째 계속되면서 빈사상태로 몰린 지역 관광산업의 현 상황에서 이들의 성공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광주 동구는 올 가을에 ‘제19회 추억의 광주 충장월드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일원에서 진행된 충장축제에는 국내·외에서 60만명이 다녀갔다. 그 중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제1회 버스커즈월드컵 in 광주’는 세계 각국에서 539개 팀, 1천603명의 뮤지션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같은 성과는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축제 기간 연계 프로그램으로 충장로 기준 유동인구가 46% 늘고, 매출액은 35% 증가했다.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대상 수상 자치단체인 장흥군의 사례에서도 명확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내 최대 물축제로 명성을 확고히 다진 ‘정남진 장흥 물축제’ 만으로도 대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 지난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9일 동안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장흥, 물과 사람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장흥군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축제에 역사와 문화의 색채를 덧입히는데 공들였다.

개막 첫날 진행된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공예태후 호위 행렬을 재현한 역사 테마 프로그램으로 연 출했다. 매일 오후 2시 지상 최대 물 싸움장에서는 신나고 흥이 넘치는 물싸움이 펼쳐졌다. 야간 프로그램으로는 ‘워터樂園파티’가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워터樂園파티’는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준급 유희파티였다.

여기에도 군민들의 참여도 축제 성공에 한몫 거들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10여개의 자원봉사팀이 행사장 일원을 청소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물축제에 전국에서 58만6천여명이 방문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3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관광재단의 사례는 특별한 시사점을 갖는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의 MICE 산업에 쏟은 열정을 확인했기에 그렇다.

전남관광재단은 올 한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MICE 산업 형태 변화에 따른 맞춤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남 MICE 산업 유치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우선 MICE 행사 개최 시 단체·법인 등에 규모별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펼쳐 올해 총 37건을 유치, 1만 5천94명의 국·내외 방문객을 이끌 어냈다.

전남 MICE 산업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마케팅에도 주력했다.

전남 MICE 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국내·외 1만1천여개 관계 기관 대상 온라인 홍보, 국내 200개 소·국외 50개소 대상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홍보해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해외 관계자 초청 팸투어·MICE 박람회에 참여해 바이어 대상으로 현장 상담 등 엔데믹 이후 전남 MICE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남 MICE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협업 구축으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확보했다.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광주와 전남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다. 관광객 유치실적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관광자원에 서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가 엄습한 2020년 이후 사라졌던 축제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이다. 여기에 전남방문의 해를 맞아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지역의 모 든 자치단체장은 빠짐없이 관광산업 육성을 지역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왕에 광주 동구와 장흥군이 우수 사례를 내 놓았으니 잘 살펴보자. 여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치칼럼



임 우 진

민선6기 서구청장

여러분은 혹시 ‘서울당’, ‘직접행동영등포당’,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정치당’, ‘진주같이’ 등 지역정당을 알고 계십니까? 자가지역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지역정당들이다. 물론 현행 정당법(1962년 제정)에는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등록하게 돼 있어 아직 법적 정당은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치가 아닌 지역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거대 양당이 지역을 분할 지배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입법조사처, 일부 국회의원들 까지도 지역정당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한국 정치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운동의 출발을 선언했다. 이처럼 지역정당제를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실현코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본다.

지역정당제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정선거로 역량있는 지도자를 뽑아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가 거대 양당 중심으로 그들에게만 유리한 지역독점 지배구조와 정치시스템을 구축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이를 개혁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고수하고 저급한 대결의 정치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상 정당으로 무력화, 대선은 최악의 네 거터브선거로 전락, 지방선거는 거대양당의 독점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기호가 돼버렸다는 점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치적 독점지배구조의 회생양이 되어있는 영·호남 지역은 모든 권력이 특정정당에 집중돼 지역사회는 비판의식 약화, 다양성 상실과 획일화로 활력과 역량이 쇠퇴해가고 있다. 아울러 쉽게 당선된 선출직들의 역할에 실망하고, 집중된 권력의 비효율과 낭비, 부패를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병폐가 바로 지역독점의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시민사회 등의 개혁요구에 대해 거대 양당은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외면하고 있고, 정치권을 침범해야 할 시민들은 대중민주주의의 한계와 지역주의 등으로 인해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정당제를 통한 정치개혁이 가능성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어 논의가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지역정당제는 과연 어떤 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숙박업소에서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

왜 지역정당제인가?

점에서 제도화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첫째,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 자유가 있고, 따라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당법은 60년전 루데타세력이 정치활동을 제한하려고 만든 통제지향의 정당법에 묶여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제 지방화, 다원화, 그리고 자치시대에 부합하도록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정당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정당제는 정치적 분권과 중앙의 정치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행·재정적 분권, 정치적 분권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행·재정적 분권도 문제지만 정치적 분권이 되지 않아 중앙정치가 지역을 철저히 지배함으로써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역정당을 활성화시켜 중앙정당을 견제하게 하고, 중앙과 지역의 정당이 건설적인 경쟁관계를 형성, 독점적인 중앙정치권력을 지역정당과 나누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양당의 정치적 독점의 폐해가 워낙 큰 영·호남에서는 경쟁적인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개혁과제다. 지역정당과 기존 지배정당이 지방정치를 둘러싸고 경쟁을 하게 되면 지역독점의 폐해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선거를 좌우하는 경향, 지역주의 정당구도인 영·호남 유권자들의 선택권 제한 등을 극복하는데도 지역정당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넷째, 지역정당제는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집중 논의하게 한다. 즉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정치구조에서는 지역의 문제들이 중앙의 양당과 중앙정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지역문제도 중앙정치를 거치지 않으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웬만큼 큰 문제가 아니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즉 양당정치가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문제 극복에도 지역정당제가 유용할 것이다.

이처럼 유용한 지역정당제는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거대 양당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개정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지역정당제는 우리 정치와 자치발전에 많은 이점이 있고 거대양당이 지역정치에서 누리던 텃밭지 못한 기득권을 지역민에게 돌려주겠다고만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부담은 적어 양당의 많은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안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성숙된 지역정당제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국민여론의 힘으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일이다. 특히 민주화의 물꼬를 텃던 우리 광주는 실질적 민주화로 민주화를 완성해야 할 지금, 지역정당제 실현에 앞장섬으로써 진정한 민주도시로 위상을 드높였으면 한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신분증 위·변조’ 명백한 범죄행위

일부 청소년들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들의 위·변조 신분증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실제 영업정지 등 처벌은 업주들에게 가중되기 때문

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숙박업소에서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

또는 감경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들어온 미성년자들로 인해서 생긴 행정처분을 우회하여 영업장만 책임지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의로 가짜

* 위·변조 신분증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도 강력 한 처벌이 있어야 유사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382로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8자리를 연속으로 입력하면 발급 일자 불일치 등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운·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장)

社 說

당위성 충분한 ‘5월 광주항쟁’ 명칭 변경 제안

5·18기념재단이 서울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5·18정신과 헌법 전문 국회 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명칭 변경 제안이 제기됐다.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이란 명칭에 과정이 포괄되지 않았고, 장소와 주제, 변혁성 등이 부족하다”며 “5월 광주항쟁” 또는 “광주 5월 항쟁”으로 바뀔 헌법 전문 수록 당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은 ‘광주’라는 장소성과 5월18일부터 27일까지의 ‘항쟁 기간’, 민주화운동의 ‘주체·변혁성’ 등이 삭제된 채 이름이 지어졌다면 이는 지역주의 정치가 가져온 호남 고립에 대한 우려, 민주화운동 참여 주체의 불특정성 등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다.

앞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헌법 전문 수록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에 입각해 법률 등 다른 하위규범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이미 존재한 법률 등 규범의 해석도 이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5·18의 경험, 의미를 민중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이념과 정책의 투입 및 산출로 사회에 긍정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 퇴직 공무원·의원 특혜 경로당 용납못해

퇴직 공무원 모임 단체인 광주광역시 행정동우회가 2017년부터 서구 치평동 한 경로당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구는 운영비와 비품 구입비로 6년 간 예산 2천46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시도 행정동우회에 2020년부터 홍보 책자 제작 등 명목으로 7천2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과 비품 조사 등을 해왔지만 제재나 지적은 없었다.

남구에서는 전직 구의원 28명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가 진월동에 건물 2층을 임차해 조성한 전용 경로당이 논란이다. 남구는 보충 5천만원, 리모델링비 1천990만원, 가전제품 등 물품 1천700만원을 지원했고, 매달 월세도 82만5천원을 제공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명백한 위법이다. 2013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시우회(퇴직공무원), 의정회(전·현직 의원)에 대한 일반·포괄적 보조금 지급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참여자지21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조례와 그 근거가 되는 행안부 시행령을 위반해 놓고도, 이를 반성하고 고치려고

5·18은 1980년 이후 진행된 민주화운동의 모체다.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하루빨리 이행돼야 하겠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 주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올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메시지를 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고 강조했다. 상징곡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열창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지만 5·18에 대한 왜곡 및 폄훼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중성과 공동체성에 입각해 5월 광주항쟁으로의 명칭을 바꾸는 것, 타당하다. 부마항쟁·6월항쟁처럼 독재 권력의 폭압에 맞서 자기희생적 저항과 투쟁을 벌였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광주정신이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법 전문 수록 및 명칭 변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7명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개헌 과제다.

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식으로 항변한다”며 공식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의원과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권과 특혜를 당장 중단하라”며 즉시 폐쇄와 보조금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에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조치해야 한다. 특혜 지원을 몰랐다면 공무원의 배임에 해당된다.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하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지자체 예산으로 경로당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지급받아 전유물로 삼아왔더니, 놀랍기만 하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를 제 스스로 특권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심스럽다.

서둘러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법적 검토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공무원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공동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아침물어는 詩

신작(新作)

이성부



내 마음이 식은땀을 흘리는 것은 어인 일이나.
죄지어서 떨고 쏘는 내 몸뚱어리 어인 일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 한 사람 저를 불태워도 죽지 못
한
먼 사막을 문득 서울 신촌 뒷골목에서 만나
코 막고 눈 감고 무릎 꿇어 귀기울여도 달라진 것이 없다.
상처만 더 깊어졌을 뿐. 안 보이는 곳에서 울음 우는 시간들 더 많
아졌을 뿐.
크낙한 돌부처 입다똥으로 더욱 굳어가고 있을 뿐.
무슨 시(詩)들이 이리 많아서 서로 잡아먹고 있느냐.
무슨 짐승들 이리저리 날뛰고만 있느냐.
(시집 ‘깨끗한 나라’, 미래사, 1991.)

[시의 눈]

요즘은 시의 시대일까요. 이 가난한 지상을 누비는 시가 재봉틀질보다 빠릅니다. 카톡에 카페에 페이스북에 문자편마다 색칠 같은 행복한 시가 넘치지요. 방금 온 좋은 글을 높은 눈에 담기토 전에 벅찬 날을 예고한 시가 ‘까뽕까뽕’ 또 두드립니다. 마치 장끼가 까투리 부르듯 새벽눈을 발가벗기려 아단이지요. 하지만 신작 쓰긴 두려워요. 오늘날 자판 앞에 밤을 지새니까. ‘먼 사막을 문득 신촌 뒷골목’으로 불러오듯, 상상으로 태우는 밤, 태양의 반대편으로부터 오는 긴꼬리 헬리를 붙잡았지 하지요. 한때, 신작은 곧 익숙한 구태의 강에 나지빠지는군요. 불을 뿜는 용의 시는 커녕 이무기도 되지 못합니다. 물뱀으로 뿜어나 누비면, ‘식은땀’만 ‘흘리는’ 밤중의 몸부림을 보고 신은 꾸짖습니다. ‘어미 생을 베껴먹는 아들이, 술골발 났쥬는 멧돼지라도 물리칠 주술시를 외가라’. 이성부(1942~2012) 시인은 광주에서 나 1959년 전남일보 신춘문예, 1962년 ‘현대문학’으로 나왔고, 시집으로 ‘이성부 시집’(1969), ‘백제왕’(1977) 등이 있습니다. 그는 고통받은 역사 속에서도 의지를 칼처럼 버린 시인이지요.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초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익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 고 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 획 사 업 국 650-2079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